

사설

의대생 꿈수 복귀, 학칙 엄정하게 적용해야

우리학교 의대생 전원이 복귀했지만, '등록 후 수업 거부'라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 전원이 복학 신청서를 제출하며 형식적으로는 학교로 돌아왔지만, 실제 강의실에 모습을 드러낸 학생은 극히 일부다. 우리학교 의대 행정실은 강의 미수강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른 유급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그 말이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제는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학칙에 근거한 단호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집단 휴학을 감행했던 의대생이 복학 마감 시한을 앞두고 대부분 복귀하면서, 당초 우려됐던 대규모 제적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행정적 '복귀'가 곧 교육의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학교 예과, 본과 모두 수강신청률은 약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단순

한 등록 행위만으로는 복귀로 간주할 수 없으며, 실제 수업 참여와 학점 이수를 통해서만 정상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의 강의 참여가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는 단순한 학내 문제가 아니라 의료 공백을 야기하는 국가적 문제로 번진다. 현재도 전국의 수많은 응급실과 전공의 수련 과정은 구조적으로 마비된 상태다. 복귀한 의대생마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의사 양성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리적 책임이다. 의사는 생명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정점에서 있다. 이러한 직업을 선택한 이들이 교육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한 학업 거부가 아니라, 장차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의

“
‘복귀’는 수업을 통해서만 완성되며, 그 안에서만 의사의 책임과 신념이 자란다

료 윤리 강령은 의사의 책무로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철저히 수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수업을 거부하고 실습을 방기하는 이유가 외압이든 본인의 선택이든, 현재의 행태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귀 의대생은 조속히 강의실로

복귀해야 한다. 특히 그간 우리학교는 지난해 유급 조치를 철회하며 사실상 의대생에게 학칙의 예외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 연세대는 미수강 학생에게 유급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더는 '등록만 한 복귀'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중시해야 할 이들이, 지금 그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복귀'는 수업을 통해서만 완성되며, 그 안에서만 의사의 책임과 신념이 자란다. 여론은 의대생을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 미복귀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다. 이미 충분한 인내를 보여줬다. 이제는 학생이 그 신뢰에 답할 차례다.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며 열심히 공부했던 본인의 청소년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초심을 잡길 바란다.

세시봉

끝이 아닌 시작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길고도 답답한 4개월이었지만, 이는 결코 끝이 아니다. 파면 당사자와 그 주변에 있던 책임자들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죄로 고발된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내란 방조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높은 기관의 법관으로 지명된 것이다. 이 장면을 바라보며, 한 시민으로서, 학생으로서 질문하게 된다. 법은 정말 모두에게 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러한 현실은 법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지금의 상황은 정치적 문제, '내 편이 잘 했고, 네 편이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다. 정의와 책임,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다. 지금 상황이 잘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부도, 사법 시스템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된 지금, 모든 책임자는 법 앞에 서야 한다. 수사기관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검 또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정권 교체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을 위협한 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된 선례로 남아 또 다른 권력자에게 면죄부가 될 뿐이다.

파면이라는 큰 산을 넘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사람들과, 이를 가능케 한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같은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 없이는 정의도, 민주주의도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이번 계엄은 국민이 막아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추운 날씨에도 은박지를 뒤집어쓴 키세스 시위대와 유쾌한 문구가 적힌 깃발이 펄럭이던 시위를 기억한다. 국민이 힘쓴 만큼 이전 법이 그들을 심판할 때다.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발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한 번 지켜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내야 할 약속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자유전공학부 중운위 참여 문제

융통성있는 학칙개정 필요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신설 학부인 자유전공학부 학생회가 결국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로 인준되지 못했다. 학칙에 따른 결정임은 이해하지만, 단과대 단위 학부가 주요 의결 기구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못 가지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총학도 이를 고려해 자유전공학부 측을 배려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제9차 중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총학생회 측에서 “자유전공학부에 의결권은 없더라도 참석권 정도만 부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안과 관련해 일부 중운위원은 “중운위 회의에 와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절반 이상일 것 같다”며, “학교생활을 해본 재학생은 회의 내용 파악이 가능하지만, 신입생 입장에선 파악이 가

능할 것 같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자치 참여의 한계와 이해도를 단정짓는 것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내년에도 자유전공학부가 중운위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유전공학부 특성상 2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타 전공으로 흩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제13차 중운위 회의에서 “내년도 중운위를 통해 자유전공학부를 예외로 두는 세칙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 언급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가 중운위 회의에 참관조차 못 하는 것은 사실이며, 결국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무엇보다 올바른 절차로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칙을 존중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 자치 실현 의지를 바탕으로 자유전공학부 1대 학생회가 마련된 이상, 문제 해결을 내년으로 넘기기보다 중운위 회의 참석권 부여 등의 방안이 조속하게 마련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만평 자유전공학부의 목소리가 축소될까 우려스럽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